

연구논문

##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 현황 측정을 위한 개념적 구분과 조사설계 방안\*

권다운\*\* · 최슬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동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여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그리고 혼인·동거 상태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차이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해 비혼 동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결혼과 비혼 동거의 개념 및 유형을 재정의하고, 응답 오류를 최소화하는 조사설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혼인상태를 직접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연구자가 설계한 후속 질문들을 통해 유형 구분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도록 하였다. 2025년 4~5월에 실시한 「가치관 조사」(25~49세, n=4,000)의 분석결과, 혼인신고만을 기준으로 기혼을 정의하면 커플 중 비혼 동거 비율은 12.0%였으나, 기혼의 정의에 결혼식까지 포함하면 6.8%가 되었다. 이는 응답자 판단이 개입할 경우 비혼 동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최근 동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의 시간 간격 확대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또한, 동거 중인 응답자의 81.5%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로, '결혼과 유리된 동거'는 소수에 그쳤다. 비혼 동거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타당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확한 개념 정의와 일관된 측정 기준에 기반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결혼, 비혼 동거, 조사설계, 혼인상태

\* 이 논문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3096777).

\*\*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객원연구원(dekwan@snu.ac.kr), 제1 저자.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chois@kdischool.ac.kr), 교신저자.

##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 동거와 혼인 외 출산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변수정 외 2023; 김유진·진미정 2024; 김원정·김순남 2018).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비혼 동거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61.8%에서 2024년 81.4%로 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 2023 & 각 연도a). 같은 기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 역시 29.8%에서 44.0%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행태에서도 나타난다. 오랫동안 2% 이하에 머물렀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8%에 이르렀다(국가데이터처 2025). 비친족 가구 역시 증가 추세로, 비친족 가구 원 수는 2015년 47만 명에서 2024년 123만 명까지 늘어났다(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b). 비친족 가구에는 상당수의 비혼 동거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025년 9월,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논의를 공식화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a). 당시 발언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지만, 실제 여론은 이미 구체적인 법안 발의 단계까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신다인 2025).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b). 비혼 동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동거 규모를 추정해 왔다. 첫째는 동거를 응답 보기 중 하나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혼인상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응답자가 스스로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동거 중 하나를 고르며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2005년 이후)와 2018년 「사회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는 혼인상태를 먼저 묻고,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혼인신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기혼’ 혹은 ‘배우자 있음’이라고

답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거로 분류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 그리고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2018년 제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동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동거 여부를 응답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혼인상태 판단을 응답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에서는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주관적 인식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상황에서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혼인상태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결혼의 시작 시점을 결혼식으로 본 응답자가 70.1%로 가장 많았고, 동거 시작(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 비율은 20.3%,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본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따라서 결혼식을 마쳤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여부를 자기판단에 따라 응답하게 하면 상당수는 ‘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서는 이들은 아직 미혼 상태이다. 또한, 일부는 이를 고려해 ‘미혼’ 또는 ‘동거 중’을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어 측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특히 최근 동거·결혼식·혼인신고가 분리되고 그 간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단계를 어떻게 구분해 측정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혼인신고 자료를 보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10년 5.7개월에서 2024년 8.2개월로 증가했다. 결혼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비율은 2010년 83%에서 2024년 73.6%로 감소했지만, 6개월~1년이 걸린 경우는 7.8%에서 9.3%로, 1년 이상 걸린 경우는 9.2%에서 17.1%로 크게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 각 연도c).

이처럼 미혼에서 동거, 결혼식,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이행이 연속적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각 단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혼·결혼·비혼 동거를 일관된 기준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째, 혼인상태와 동거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둘째, 동거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설계 방식을 제안한다. 셋째, 이 설계를 실제 조

사에 적용해 현재 한국 사회의 동거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조사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존 조사방식의 문제점

### 1. 기존 연구에서 비혼 동거의 정의와 유형 구분

비혼 동거(non-marital cohabitation, 이하 동거)는 전통적인 혼인제도 바깥에서 형성되는 남녀 또는 동성 간 결합 형태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다르게 정의됐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거의 목적, 결혼과의 관계, 제도적 규범으로부터의 거리감을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 구분을 제시하였다.

한국보다 동거가 활발한 유럽 사회에서 동거 형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과의 연계성이나 관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Villeneuve-Gokalp 1991). 첫 번째 유형은 시험적 결혼(trial marriage)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동거 형태를 말한다. 즉, 결혼을 염두에 두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함께 살아보는 관계다. 두 번째 유형은 ‘일시적 결합(temporary union)’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나 약속 없이 이루어지는 단기적 동거 관계를 의미한다. 연애의 한 과정으로 함께 살거나, 주거·경제적 필요 등 현실적인 이유로 동거가 형성되는 경우다. ‘시험적 결혼’은 결혼 전 단계 동거, ‘일시적 결합’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세 번째 유형은 공식적인 약속이나 법적 책임 없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동거 관계(stable union without commitment)이다. 제도나 계약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상호 신뢰나 생활의 공유를 통해 유지되는 동반적 관계이다. 네 번째 유형은 결혼제도 밖에서 형성된 사실상 가족 형태로, 법적 결혼 없이 가족을 구성한 자유 동거(free union) 관계다. 제도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생활과 유사한 형태로 살아가는 관계를 가리킨다.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도 동거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있다. 변수정 외(2016)는 한국의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일곱 가지 동거 이유를 고려하여 동거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즉, 결혼의 단계로

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의 단계로서의 동거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혼인 지연, 가족 반대, 혼인 전 상대방에 대한 확신 등이 포함되었다.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의 이유에는 결혼제도와 규범에 대한 반발, 구체적 혼인 계획 부재, 생활비 절약 등이 포함되었다.

동거 선택의 이유에 따라 동거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 국내 연구도 있다(이연주 2008). 첫째, 예비동거(precursor to marriage)는 결혼 의사가 있고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며 확인하려는 형태로, 개인주의 확산과 이혼 증가가 이러한 동거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된다. 둘째, 대안동거(alternative to marriage)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결혼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결혼의 차선책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체동거(substitute for marriage)는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로 제도 밖 결합을 선택하는 형태이다. 넷째, 편의동거(cohabitation for convenience)는 장기적 헌신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동거로, 결혼의 대안이라기보다 독신생활의 대안에 가깝다.

법적인 관점에서 동거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주목하여 동거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조은희(2009)는 혼인신고 의사 유무를 중심으로 자발적 선택적 동거, 혼인 장애적 동거, 일시적 동거로 나누었다. 김원정·김순남(2018)은 동거를 잔여 동거(residual cohabitation)로 개념화하여 규범적 제약형(전통적 결혼 규범에서 벗어난 결합)과 사회·경제적 제약형(경제적 안정성 미충족으로 인한 동거)으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 결혼 의사 여부, 동거 선택의 동기를 축으로 두고, 동거 유형을 네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 의사 여부에 따라 동거 유형을 나누고, 다시 동거 선택의 동기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거와 혼인상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결혼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동거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동거를 결혼 전 단계 동거(marriage-intended cohabitation)와 결혼과 유리된 동거(marriage-independent cohabitation),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결혼 전 단계 동거는 결혼 의사가 있는 예비적 성격의 동거이고, 결혼과 유리된 동거는 결혼 의사가 없거나 불확실성이 강한 일시적 동거부터 결혼제도를 벗어나는 대안적 동거까지 포괄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으로 이행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과도기적 동거와 결혼제도와 무관한 독립적 동거를 구분해서 한국 사회의 동거와 결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기존 조사설계 방식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동거 현황

### 1) 기존 조사설계 방식

설문조사에서 동거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인상태를 묻고 기혼자(배우자 있음)를 대상으로 법적 혼인상태 여부를 추가로 묻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혼인상태를 물을 때 응답 보기 중에 동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각각의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한 2단계 조사 방식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혼인상태를 먼저 묻고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혼인신고 여부를 다시 물어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배우자는 있다고 답했으나 법적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동거로 분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조사와 문항 예시는 <표 1>과 같다.

<표 1>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동거 상태를 추정하는 조사의 예

조사기관	조사명	문항 예시	
		혼인 상태	추가 질문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 조사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귀하는 혼인신고를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① 예'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방식은 법적 혼인을 기준으로 기혼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동거 중인 응답자가 미혼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다른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기적인 관계이거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대안적 관계의 경우일수록 배우자가 있다고 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조사원에게 솔직히 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동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없음(미혼 등)으로 응답한 만큼 동거가 과소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2) 응답자가 동거 여부를 바로 선택하는 방식

또 다른 접근은 혼인상태에 대한 질문 응답 보기 중에 ‘동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2018년 조사에서는 혼인상태 항목에 동거를 추가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동거’ 중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도 조사가 시작된 초기인 2003년과 2004년에는 혼인상태의 응답 보기에 동거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응답 보기에 동거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도 가구주와의 관계에 동거를 응답 보기 중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

<표 2> 응답자가 동거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택하는 조사의 예

조사기관	조사명	문항 예시
국가데이터처	2018 사회조사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미혼 ②배우자 있음 ③동거 ④사별 ⑤이혼 ⑥별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응답자와의 관계 - 혼인 상태 ①기혼 ②사별 ③이혼 ④별거 ⑤미혼 ⑥동거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가구주 ②배우자 ③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 ④자녀 ⑤...

응답자가 바로 동거 여부를 답하게 하는 방식에서도 측정상 한계는 존재한다. 첫

째, 여전히 동거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가 ‘동거’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으로 인해, 실제보다 동거 규모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 둘째, ‘결혼’의 정의가 개인마다 달라서, 함께 사는 파트너가 있는 응답자가 미혼과 기혼, 동거 중 어느 항목을 선택할지 응답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연애관계인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응답자에 따라 동거를 선택하지 않고 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거 중임에도 사실상 기혼으로 인식하고 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응답자는 자신을 스스로 기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두 가지 조사 방식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오거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측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응답자의 상황을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 2) 기존 조사에서 추정된 한국 사회의 동거 현황

기존 방식으로 동거 상태를 추정한 한국 사회의 동거 현황은 어떨까? 한국 사회의 동거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변수정 외 2023). 조사방식에 따라 서로 동거 규모는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유배우자 응답자 중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동거를 분류하는 방식보다 응답자가 동거 상태를 바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에서 동거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집계되었다.

### (1) 유배우자 응답자 중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동거를 추정하는 방식

사회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 방식이 한시적으로 달랐던 2018년 조사를 제외하고, 25~49세 응답자 중 동거 비율은 2020년까지 1%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2022년 동거비율이 2.1%, 2024년에는 2.9%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유배우자 중 동거 비율로 한정된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배우자 응답자 중 동거 비율은 2024년 5.3%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파악된 동거의 규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조사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다.<sup>1)</sup>

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 25-49세 유배우자 응답자 중 동거비율은 4.1%이고,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 2.0%였다

그런데 실제 집계된 수치만큼 동거가 존재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서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과거보다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동거 중인 응답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답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유배우자 응답자 중에서 동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두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동거 규모가 증가했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 없음으로 답했지만 동거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3> 연도별 25~49세 응답자 중 동거 비율 추이(2010~2024)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sup>3)</sup>	2020	2022	2024	
배우자 없음	4,508 (28.4%)	4,332 (30.5%)	4,321 (32.5%)	4,703 (35.0%)	4,734 (37.0%)	4,967 (40.9%)	4,839 (42.0%)	4,828 (45.0%)	
배우자 있음	기혼	12,649 (69.8%)	11,167 (67.6%)	10,177 (65.8%)	9,790 (63.1%)	9,470 (62.6%)	8,070 (57.5%)	7,449 (56.0%)	6,311 (52.1%)
	동거 <sup>1)</sup>	309 (1.8%)	285 (1.9%)	283 (1.7%)	280 (1.9%)	44 (0.4%)	221 (1.6%)	222 (2.1%)	286 (2.9%)
	<sup>2)</sup>	<b>(2.6%)</b>	<b>(2.7%)</b>	<b>(2.5%)</b>	<b>(3.0%)</b>	<b>(0.7%)</b>	<b>(2.8%)</b>	<b>(3.5%)</b>	<b>(5.3%)</b>
전체 사례 수 (%)	17,466 (100%)	15,784 (100%)	14,781 (100%)	14,773 (100%)	14,248 (100%)	13,258 (100%)	12,510 (100%)	11,425 (100%)	

주: 1)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중 동거자 비율.

2) 유배우자(파트너 포함) 중 동거자 비율.

3) 2018년도는 응답 보기 중에 동거를 함께 제시하고, 응답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가중치 적용한 결과값.

## (2) 응답자가 동거 상태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

앞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25~49세 응답자 중 동거 비율 추이(2010~2024)를 분석한 결과(<표 3> 참고)를 보면, 조사 방식 차이에 따른 동거 규모 차이가 뚜렷히 나타난다. 2018년 동거 비율은 0.4%(유배우자 중 동거 비율은 0.7%)로 눈에 띄게 동거 비율이 낮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혼인상태 항목에 동거를 추가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동거 중 직접 선택하도록 조사방식에 변화를 준 결과였다. 응답자가 동거 상태 여부를 직접 답하도

록 묻는 조사방식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성 또는 응답자마다 다른 주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동거 규모가 과소 집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이다.

응답자의 혼인상태 관계에서 동거를 직접 선택하게 한 또 다른 대표적인 조사 사례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이다. 2005년~2025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25~49세 응답자 중 동거 비율 추이(2005-2025)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	'18	'21	'24	'25
미혼	27.2	27.8	26.5	23.6	24.5	28.7	23.4	31.2	26.3	28.3	35.1	34.1	31.9	39.5	42.9
기혼	72.2	71.7	72.9	76.1	75.5	70.5	75.7	68.4	73.4	71.4	64.5	64.0	68.0	60.5	56.9
동거 <sup>1)</sup>	0.7	0.5	0.6	0.3	0.0	0.8	0.9	0.4	0.3	0.3	0.4	1.9	0.1	0.0	0.3
	<sup>2)</sup> <b>0.9</b>	<b>0.7</b>	<b>0.9</b>	<b>0.4</b>	<b>0.0</b>	<b>1.2</b>	<b>1.2</b>	<b>0.5</b>	<b>0.4</b>	<b>0.4</b>	<b>0.6</b>	<b>2.9</b>	<b>0.2</b>	<b>0.0</b>	<b>0.4</b>
합계	887	965	825	839	926	880	805	527	640	658	437	373	425	473	463

주: 1)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중 동거자 비율.

2) 유배우자(파트너 포함) 중 동거자 비율.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25). 한국종합사회조사 2005-2025. . 원자료, 가중치 적용한 결과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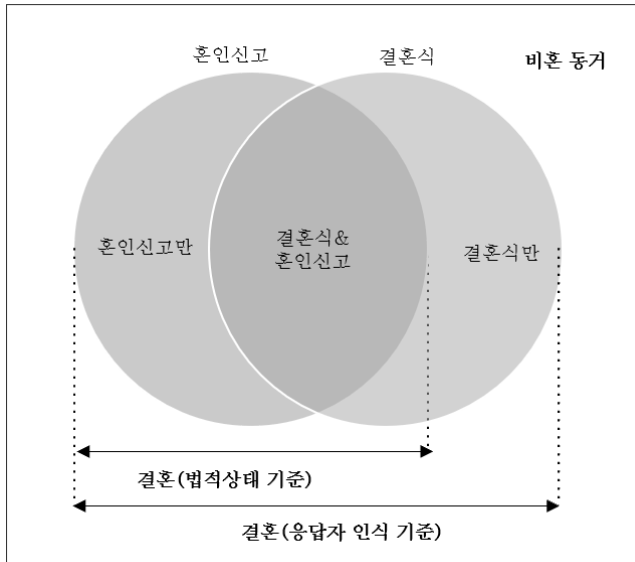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분석결과, 동거의 비율은 25~49세 응답자 중에서는 2018년을 제외하고 1% 미만 수준이다. 25~49세 유배우자 응답자 기준으로도 동거 비율은 가장 높았던 2018년 2.9%를 제외하고 0~1%대 수준이다. 이는 사회조사의 동거 비율과 비슷한 크기이다. 동거 중인 응답자 중 상당수는 조사원 앞에서 본인이 동거 중임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조사방식에 따른 분석결과는 두 가지 모두 한국 사회의 동거 현황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답하게 하려면, 어떻게 묻는 게 좋을까? 특히 결혼 전 단계 동거의 경우 실제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단계를 어떻게 구분이 되도록 질문할 수 있을까? 특히 혼인상태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려면 어떤 문항 설계가 필요한가?

### Ⅲ. 결혼과 동거의 개념적 구분과 새로운 조사문항 설계 방안

#### 1. 혼인상태와 동거의 개념적 구분과 동거 유형

미혼/기혼과 동거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거가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의 한 단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거-결혼식-혼인신고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결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혼과 동거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관계를 개념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결혼과 동거 개념

<그림 1>은 동거-결혼식-혼인신고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응답자 인식이 서로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결혼은 혼인신고 여부로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식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상태가 기혼으로 전환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박중서 외 2024). 그림에서 중앙의 겹치는 영역은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 기준이나 주관적 인식이 동일하게 기혼상태로 파악된다. 반면 결혼식만 이루어진 오른쪽 회색 영역은,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으로 동거 상태이지만, 상당수 응답자들은 스스로 결혼했다고 인식한다. 이 경우 법적 기준과 응답자 인식 기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측정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과 동거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때 혼인신고 여부뿐 아니라 결혼식 여부까지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동거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새로운 조사문항 설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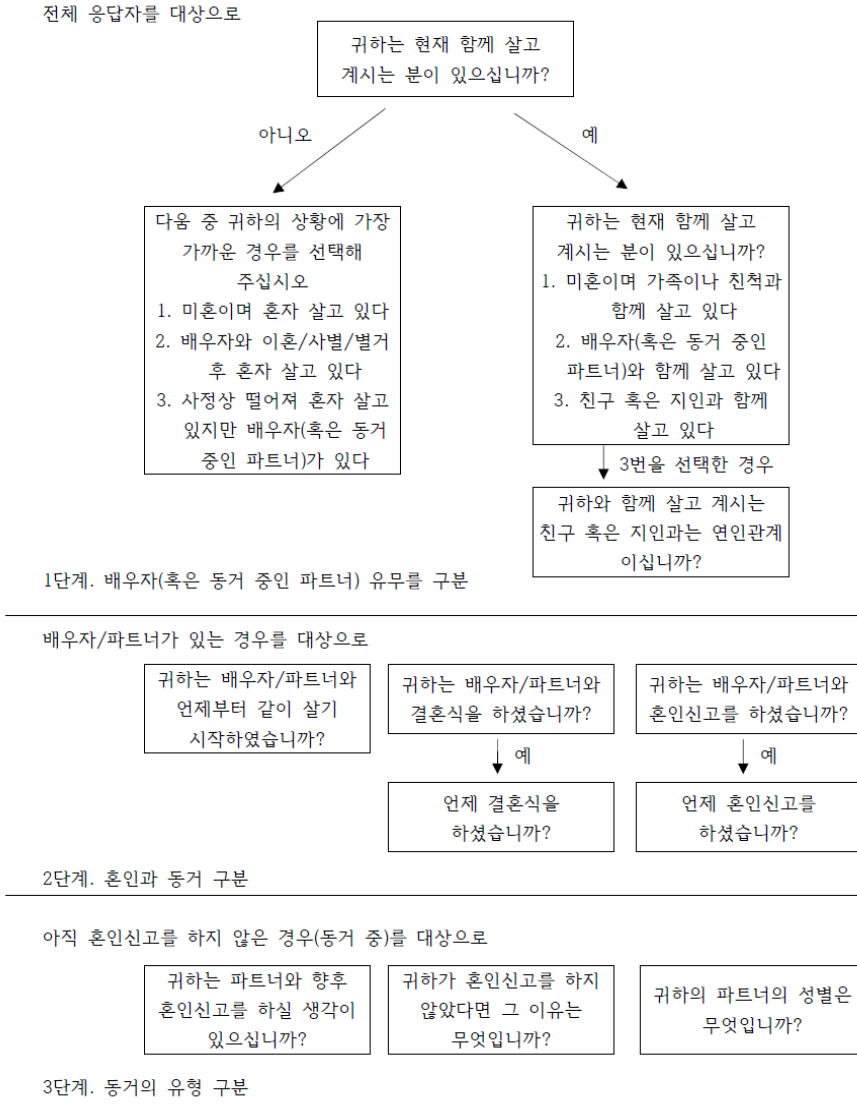
기존 조사는 대체로 배우자 유무를 먼저 묻고, 유배우자에게 혼인신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별도의 동거 문항으로 동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더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동거의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가 쉽고 객관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부터 확인하도록 질문 흐름을 구성하였다. 또한 파트너와의 동거 여부, 결혼식 여부, 혼인신고 여부를 각각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파악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예를 들어 파트너와 함께 살지만 ‘미혼’을 선택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혼’을 선택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응답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 의도로 본 연구의 설문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질문 체계로 설계되었다.

먼저 모든 응답자가 쉽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실적 문항으로 시작한다. 첫 단계에서는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혼자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으나 별거 중인지를 추가로 질문해 실제 배우자/파트너 유무를 파악한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다양한 동거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 동거인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있다고 파악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거 시작 시점, 결혼식 여부 및 시기, 혼인신고 여부 및 시기를 차례로 질문하여, 결혼 이전 단계에서의 동거-결혼식-혼인신고 간 전환 과정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혼/동거/기혼이라는 각각의 상태를 연구자가 종합하여 최종 판단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에게는 향후 혼인

신고 계획과 미신고 사유를 확인하여 동거의 성격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거 유형은 (1) 결혼 전 단계 동거(유형1)와 (2) 결혼과 유리된 동거(유형2)로 구분하였다. <그림 2>는 이러한 혼인과 동거 문항 설계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혼인과 동거 문항 설계

## IV. 분석결과

### 1. 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의 설정

본 연구는 「제3차 한국인의 연애, 결혼, 가족 가치관 조사」 자료(이하 「가치관 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었으며, 엠브레인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엠브레인은 2025년 기준 약 170만 명 규모의 온라인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모집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남녀이며, 실제 표본추출은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성, 연령(5세 간격), 지역(17개 시·도)을 기준으로 층화확률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표본 수는 총 4,000명이며, 총 유효 발송 35,380건 중 29.9%가 조사에 접속하고, 그중 70.0%가 응답을 완료하여 최종 응답률은 20.9%이었다.

본 조사는 인터넷 기반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조사로서, 응답자가 조사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동거 여부, 결혼경험, 성적 가치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서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특히 동거와 같이 개인적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문항의 경우, 대면 면접 조사보다는 온라인조사에서 더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Bernard et al. 2014; Tourangeau & Yan 2007). 다만 온라인패널의 경우, 온라인 응답에 익숙하면서 적극적인 성향이 높은 인구집단 중심으로 구성될 위험도 있어, 온라인패널 자체의 편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Couper 2000).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배우자 또는 동거 중인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25~49세 남녀 2,021명으로 한정하였다. 동거비율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도,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동거비율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응답자 기본 특성은 <표5>와 같다.

&lt;표 5&gt; 응답자 기본 특성

(N=2,021)

구분	N	Percent
성별		
여성	1,055명	52.20%
남성	966명	47.80%
계	2,021명	100%
연령		
25-29	114명	5.60%
30-34	297명	14.70%
35-39	397명	19.60%
40-44	561명	27.80%
45-49	652명	32.30%
계	2,021명	100%

## 2. 동거 현황

「가치관 조사」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동거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결혼의 정의에 따라,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2,021명의 응답자 중 기혼과 동거 규모이다.<sup>2)</sup>

- 2)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0명(약 0.5%)은 동성 커플로 확인되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중에 동성 커플이 일정 부분 존재함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0.5%가 우리 사회 전체의 동성 커플 인구의 비율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낙인이나 사생활 보호 우려로 인해 일부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동성 파트너가 있음에도 ‘배우자/파트너 없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온라인패널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개방적인 응답자가 많아, 동성커플이 다소 과대집계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실제로 다 과소 혹은 과대집계의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 커플이 존재하고 있음만을 확인하고 이후 별도의 특성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lt;표 6&gt; 결혼의 정의에 따른 연령대별 유배우자(파트너 포함) 중 기혼과 동거 규모

연령대	결혼시작점 기준	기혼	동거	합계
25~49세	혼인신고	1,778명(88.0%)	243명(12.0%)	2,021명(100%)
	혼인신고나 결혼식	1,884명(93.2%)	137명(6.8%)	
30~39세	혼인신고	560명(80.7%)	134명(19.3%)	694명(100%)
	혼인신고나 결혼식	642명(92.5%)	52명(7.5%)	

첫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결혼을 정의할 경우,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25~49세 응답자의 88.0%가 기혼, 12.0%가 동거로 분류되었다. 둘째, 결혼식을 올렸거나 혼인신고 중 하나라도 완료한 경우를 결혼으로 간주할 경우, 기혼 비율은 93.2%로 상승하고, 동거 비율은 6.8%가 되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0대만을 따로 보면 동거 비율은 더 높아진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결혼을 정의할 경우, 30대 남녀 694명 중 19.3%가 동거 중이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렸거나 혼인신고 중 하나라도 완료한 경우를 결혼으로 간주할 경우, 30대 응답자 중 동거 비율은 7.5%이다. 결혼에 대한 기준에 따라 동거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달라지는 분석결과를, 조사에서 기혼 상태에 관한 판단을 응답자들에게 맡길 경우, 동거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인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3. 동거의 유형별 현황

앞서 결혼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동거의 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동거 중인 응답자의 혼인신고 의향 유무를 기준으로 동거 유형을 구분해보았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결혼을 정의했을 때 5세 연령별 동거 유형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연령별 동거 유형 현황(혼인신고 기준) (단위: %, 명)

동거 유형	비율	5세 연령별				
		25-29	30-34	35-39	40-44	45-49
(유형1) 결혼 전 단계 동거	81.5	81.7	85.7	88.0	67.9	50.0
	<sup>1)</sup> 73.7	78.0	77.4	76.2	62.5	50.0
(유형2) 결혼과 유리된 동거	18.5	18.3	14.3	12.0	32.1	50.0
사례 수	243	71	84	50	28	10

주: 1) 혼인신고 혹은 결혼식 기준으로 동거를 정의했을 때 동거의 유형별 비율.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결혼을 정의할 경우, 동거 중이라고 파악된 243명 중 81.5%가 결혼 전 단계 동거(유형1)로 분류되었다. 혼인신고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결혼과 유리된 동거(유형2)는 18.5%였다. 혼인신고와 결혼식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응답자만으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73.7%는 향후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결혼 전 단계 동거(유형1)에 해당했다. 즉, 대다수의 동거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과 유리된 동거 유형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30대와 20대 후반에서는 결혼 전 단계로서의 동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동거, 결혼식, 혼인신고의 분리 현상

##### 1) 동거, 결혼식, 혼인신고의 분리 현상과 시간 간격

동거와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분리되는 경향은 최근 더 뚜렷해지고 있을까? <표 8>은 25~49세 응답자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응답자(1,778명)를 대상으로, 동거 시작부터 혼인신고까지 걸린 시간을 혼인신고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과거 2004년 12월 이전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5.6%) 동거를 먼저 시작하더라도 6개월 이내(87.8%)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이 높아서 대부분은(93.4%) 동거와 혼인신고 간격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년여간 혼인신고를 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먼저 했거나(13.3%) 6개월 이내(40.9%)에 한 사례가 과거 수준의

2/3에 못 미친다(54.2%). 반면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동거한 비율은 31.5%로, 2004년 12월 이전(2.2%)보다 급증하였다.

<표 8> 동거 시작 이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 (N=1,778명)

혼인신고 시점	혼인신고 먼저	동거 후 6개월 이내	동거 후 7~12개월 이내	동거 후 1년 이상	사례 수(명)
'23.01-'25.04	13.3%	40.9%	14.4%	31.5%	181
'20.01-'22.12	13.2%	51.1%	15.4%	20.3%	227
'17.01-'19.12	10.9%	64.5%	11.3%	13.3%	248
'14.01-'16.12	7.9%	70.6%	9.8%	11.7%	265
'11.01-'15.12	8.2%	79.6%	3.7%	8.6%	276
'08.01-'10.12	7.0%	82.8%	3.8%	6.5%	269
'05.01-'07.12	4.8%	87.3%	4.0%	4.0%	186
'04.12월 이전	5.6%	87.8%	4.4%	2.2%	126

<표 9>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 (N=1,722명)

혼인신고 시점	혼인신고 먼저	결혼식 후 6개월 이내	결혼식 후 7~12개월	결혼식 후 1년 이상	사례 수(명)
'23.01-'25.04	23.8%	44.4%	11.3%	20.6%	160
'20.01-'22.12	22.8%	58.5%	8.7%	10.1%	219
'17.01-'19.12	18.0%	69.5%	6.7%	5.9%	239
'14.01-'16.12	11.5%	78.9%	3.8%	5.8%	261
'11.01-'15.12	13.8%	79.5%	3.4%	3.4%	268
'08.01-'10.12	11.6%	83.9%	2.3%	2.3%	267
'05.01-'07.12	11.5%	87.4%	1.1%	0.0%	182
'04.12월 이전	7.1%	90.5%	1.6%	0.8%	126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까지의 기간(<표 9>)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관찰된다. 2004년 12월 이전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7.1%) 결혼식 후 6개월 이내(90.5%)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이 높아서, 대부분(97.6%) 결혼식과 혼인신고 간격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례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거나(23.8%) 6개월 이내(44.4%)에 한 경우는 68.1%이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까지 1년 이상 걸린 사례도 20.6%로, 2004년 12월 이전(0.8%)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식과 혼인신고 간의 분리 현상이 점차 보편화함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결혼식이 곧 혼인신고를 의미하는 관행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결혼식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혼인신고를 진행하거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이전에 동거를 선행하는 등 결혼 절차의 순서가 다양화되고 있다.

동거와 결혼식, 혼인신고가 분리되는 현상은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가속화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간소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식과 동거, 혼인신고가 분리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동시에,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면서, 혼인신고 자체와 시기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합리적 선택으로 당연시하는 문화도 나타났다(변수정 외 2023).

즉,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동거-결혼식-혼인신고가 서로 분리되며 그 사이의 시간 간격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뚜렷한 기준이 되어 기혼과 미혼이 비교적 일관되게 구분되었으나, 이제는 이 세 과정의 순서와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지면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응답자에 따라 미혼·기혼·동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2) 동거 유형별, 연령별 혼인신고 유보 사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이유는 단일하기보다 복합적이다. 본 조사에서는 현재 동거 중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243명을 대상으로, 혼인신고를 유보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중응답 형태로 조사하였다.

**<표 10> 동거 유형별 혼인신고 유보 사유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명)

혼인신고 유보 사유	유형1	유형2	전체
주택 마련 등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74.8	53.3	70.8
아직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14.7	57.8	22.6
결혼제도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싫어서	24.8	66.7	32.5
사례 수	198	45	243

<표 10>은 각 사유별로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신고를 유보하는 사유 중 주택 마련 등 경제적, 현실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유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0.8%), 결혼제도를 회피하거나(32.5%), 상대방에 대한 확신 부족(22.6%)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응답자(유형1)의 74.8%는 경제적·현실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일시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과 유리된 동거(유형2) 중인 응답자들의 혼인신고 유보 사유는 결혼제도 회피(66.7%), 상대방에 대한 확신 부족(57.8%) 및 경제적·현실적 요인(53.3%)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동거를 선택한 사유에 따라 동거 유형을 다시 세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연령별 혼인신고 유보 사유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명)

혼인신고 유보 사유	연령별 동의 비율					전체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주택 마련 등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54.9	83.3	86.0	60.7	30.0	70.8
결혼제도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싫어서	33.8	21.4	30.0	50.0	80.0	32.5
아직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25.4	21.4	22.0	17.9	30.0	22.6
사례 수	71	84	50	28	10	243

20대에서는 경제적, 현실적 요인(54.9%), 결혼제도 회피(33.8%), 상대방에 대한 확신 부족(25.4%) 등 다른 이유가 고르게 나타났지만, 30대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택 마련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응답해, 주거·경제적 제약이 30대에서 혼인신고 유보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법적 결혼을 배제하기보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결혼제도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싫어서 혼인신고를 유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결혼이 선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혼 혹은 동거 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택편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논의

2024년 혼인 외 출생아 비율과 비친족 가구 비율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동거를 둘러싼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비해 동거의 정확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동거와 결혼의 개념적 경계와 실제 현황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응답자가 결혼의 시작 시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상황도 서로 다른 혼인상태로 응답될 수 있어, 조사 설계방식에 따라 동거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혼인상태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연구자가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설계하였다. 아울러 결혼과 동거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혼인신고 여부뿐 아니라 결혼식 여부를 혼인상태의 또 다른 기준으로 포함해 동거 규모를 각각 달리 산정해보면서, 기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거 유형은 혼인신고 의향 유무를 중심으로, 결혼 전 단계의 동거(marriage-intended cohabitation)와 결혼과 유리된 동거(marriage-independent cohabitation)로 구분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된 「가치관 조사」 분석결과, 혼인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혼을 정의할 경우 25~49세 유배우자 응답자의 12.0%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연령대 여덟 커플 중 한 커플은 동거 중인 것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30대만 따로 보면 동거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30대 유배우자 응답자의 19.3% 즉, 다섯 커플 중 한 커플이 동거 중이었다.

그러나 결혼식 여부까지 결혼의 기준에 포함하면 동거 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25~49세 유배우자 응답자 중에서 동거비율은 6.8%이었다. 30대만 보면 7.5%가 된다. 기준에 따라 동거 규모가 25~49세에서는 5.2%p가, 30대에서는 11.8%p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즉 결혼식은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25~49세에서는 전체 동거 규모의 절반 가까이가, 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동거 증가 경향이 상당 부분은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시사한다.

동거 중인 25~49세 응답자를 동거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243명 중 81.5%가 결혼 전 단계 동거(유형1)에 해당했다. 30대에서도 양상은 비슷해, 동거 응답자의 86.6%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였으며, 결혼과 유리된 동거(유형2)는 13.4%에 그쳤다. 즉, 동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혼식까지 마쳤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거가 절대다수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25~49세 유배우자 응답자 중 12%라는 동거 규모는 기존 조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루어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유배우자 중 동거 비율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결과는 2024년으로 5.3%에 불과했다. 두 조사 간에 동거규모는 6.7%p 차이를 보인다.

두 조사 간의 차이는 일정 부분은 본 연구가 온라인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높은 동거 비율은 온라인패널의 편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여러 특성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명 가능한 차이로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동거로 측정되었다. 실제로 결혼식을 기준에 포함하면 동거 비율은 6.8%가 되고, 사회조사와의 차이는 1.5%p로 크게 줄어든다.

둘째, 문항설계를 3단계로 나누어 동거 현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에 따라 미혼이나 기혼으로 응답했을 동거상황도, 다양한 추가 질문을 통해 정확한 혼인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응답자들이 더 솔직하

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별도의 조사원이 없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감한 질문에도 보다 솔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동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과거 자료 대비 최신자료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치관 조사」는 2025년 4~5월에 수집된 자료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행태의 최신 변화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료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부터 넷째까지 이유로 1~2%p만큼 동거가 추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12%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수치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동거는 더 이상 보기 드문 소수의 사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결혼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라고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동거 중인 커플 중에 81.5%가 향후 혼인신고 의향이 있었다. 제3의 대안적 유형이거나 결혼생각은 없는, 결혼과 유리된 형태의 동거는 18.5%에 불과했다. 물론 동거-결혼식-혼인신고 간에 시간적 간격이 멀어지면서 향후 각각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점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가 온라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볼 지점이다. 온라인패널 자료는 대면조사와 비교하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 민감 주제에 대해 보다 솔직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Bernard et al. 2016; Tourangeau & Yan 2007), 동시에 특정 연령·교육수준 집단이 과대표집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성 측면에서 제한을 가질 수 있다(Couper 2000). 특히 동거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 온라인조사가 응답 진실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지만(Tourangeau et al. 2013), 온라인패널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성향이 표본 특성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 경향 파악의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본 수 또한 유배우자 2,021명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규모이지만, 동거 집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 5세 연령대별로 세분할 경우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결과 해석에 있어서 분석대상 연령이 25~49세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연령대는 혼인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결혼 전 단계 동거 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 범위를 20대 초반이나 50대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전체 동거 비율뿐 아니라 동거의 이유 자체도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결혼과 동거의 상태 측정에 있어서 측정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특히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각각 결혼의 기준으로 설정해 측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것은, 혼인상태 측정에 내재한 신뢰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이자, 향후 조사설계에서 정교한 개념 정의와 객관적 문항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 사회의 동거 현황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 아래 동거와 혼인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항 설계가 필수적임을 제시한 점 역시 중요한 기여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동거 규모는 실제 증가하고 있는 동거의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응답의 솔직성 증가, 결혼식-혼인신고 간격 확대 등 최근 사회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동거의 절대다수가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거라는 사실은, 단순히 동거 증가라는 표현만으로는 추세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김원정·김순남. 2018.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가족제도: 1995-2016 혼인신고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4): 61-90.
- 김유진·진미정. 2024. 연령대별 비혼 동거자의 특성 및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1): 61-82.
- 박종서·이지혜·정희선·이소영·장인수·최선영·이혜정.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김혜영·백승흠·오정아·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 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엄다원·안문희. 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2): 77-100.
- 조은희. 2009.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대안에 관한 검토.” 《젠더법학》 1-2(2): 1-38.

진미정·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1-14.

Bernard, H.R. and Gravlee, C.C. (Eds.). 2014. *Handbook of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Rowman & Littlefield.

Couper, M.P. 2000. “Web Surveys: A Review of Issues and Approache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4): 464-494.

Tourangeau, R., F.G. Conrad, and M.P. Couper 2013. “The Science of Web Surveys.” Oxford University Press.

Tourangeau, R. and Yan, T. 2007. “Sensitive Questions in Surveys.” *Psychological Bulletin* 133(5): 859.

Villeneuve-Gokalp, C. 1991. “From Marriage to Informal Union: Recent Changes in the Behaviour of French Couples.” *Population* 3: 81-111.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8.28.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2024년 출생통계. 2025.8.27.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담는다. 2025.7.3. 보도자료.

신다인(2025.9.16). ‘비혼 출산’ 5% 돌파... 결혼 안 해도 출산 동거 사회 오려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a.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월 넷째주 TMB 뉴스]비혼 출산이 늘고 있어요!. 2025.9.25.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b.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제도적 시각지대 점검·대응 논의. 2025.8.8. 보도자료.

<홈페이지>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a. 사회조사. 건강/교육과훈련/범죄와안전/가족/생활환경.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2025.8.23. 인출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b.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1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JC1515%26vw\\_cd%3D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12_2015_1_10_1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JC1515%26vw_cd%3D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

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  
Id%3D%26. 2025.11.1. 인출.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c. 인구동향조사. 혼인연간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_Svc/ofrSurvSearch.do?  
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_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2025.11.1. 인출.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_Search.  
do?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_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2025.8.23. 인출.

<접수 2025.11.04; 게재확정 2025.11.14>

## **Measuring Non-Marital Cohabitation in South Korea: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Survey Design Improvements**

Da-eun Kwan

(Seoul National University-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Seulki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terest in non-marital cohabitation has grown in South Korea, yet its prevalence remains unclear due to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respondents'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marital status in existing surveys.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measurement framework that conceptually distinguishes marriage from non-marital cohabitation and uses factual, sequential questions to reduce misclassification. Using data from the 2025 Korean Values Survey (ages 25–49;  $n = 4,000$ ), we find that estimated cohabitation prevalence differs substantially by the definition of marriage: 12.0% when based solely on legal registration versus 6.8% when wedding ceremonies are also included. This gap indicates that respondent-driven classification inflates or deflates cohabitation estimates and reflects the increasing temporal separation between wedding ceremonies and legal registration. Among cohabiting individuals, 81.5% reported premarital cohabitation, while cohabitation independent of marriage was relatively uncommon.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clear conceptual definitions and consistent, researcher-driven measurement criteria to produce reliable estimates of non-marital cohabitation.

Key words: non-marital cohabitation, marriage measurement, survey methodology, social desirability bias